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재정적자로 몸살 앓는 브라질, 현명한 처방은 연금개혁

정재민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브라질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다. 하지만 최근 수 년 동안 무역수지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세입을 비롯한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방식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출감축안은 대부분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부처간 이해 상충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적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씹씹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거세다. 특히 연금 지출 부분은 브라질 재정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퇴진 압력으로 위기에 처한 미셸 테메르 행정부에게 연금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브라질 연방정부가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이 연금 부문으로 지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되면 연금개혁은 브라질 정부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당장 꺼야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설득을 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불끄 공리를 하다보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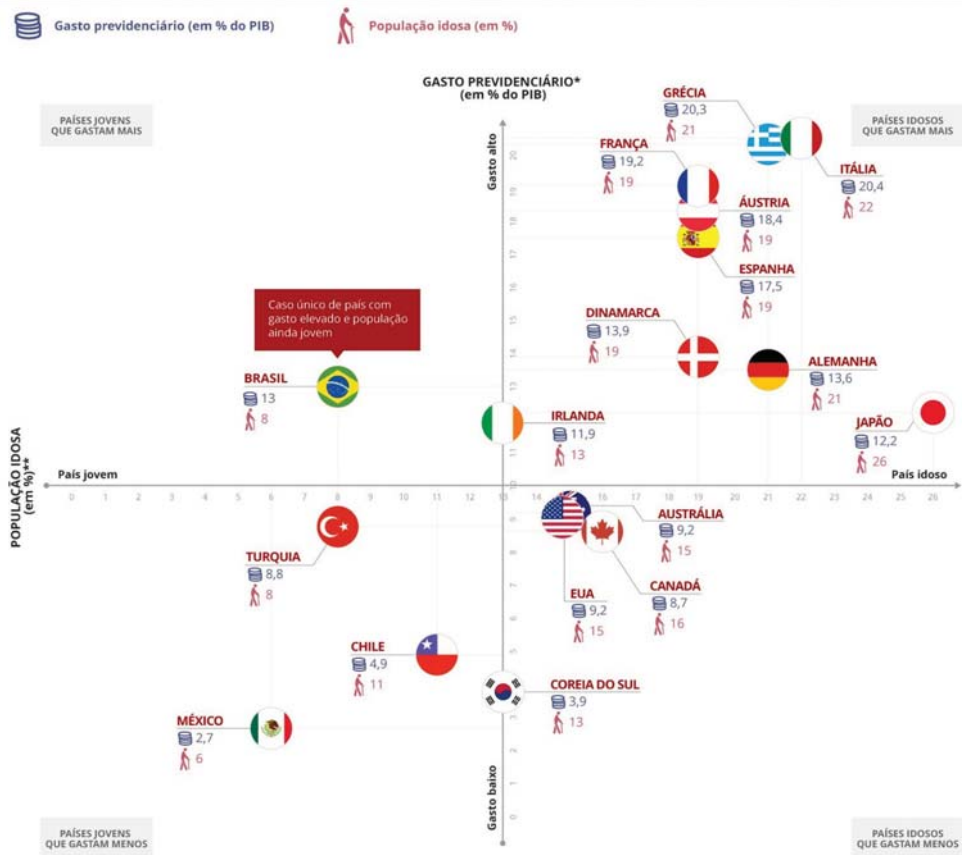
최근 어느 재무부 고위 관료는 "대폭적인 연금 지출 증가로 올해 상



재정적자로 브라질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출처: <https://cdn.pixabay.com>)

반기 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지출을 삭감해도 연금이 다 삼켜버린다는 한탄이다. 실제로 브라질 연방정부가 투자와 각종 비용 등을 삭감하는 노력으로 1분기 동안 줄인 지출 규모는 100억 헤알이었는데, 연금부문 지출은 오히려 160억 헤알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비용을 절감하려 해도 연금으로 세어 나가는 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브라질은 지금 재정적자를 현실로 받아들인 지 수 년째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브라질 정부가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재정적자 목표치 1390억 헤알을 맞추기 위해 421억 헤알의 지출을 긴급 삭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연금 등 브라질 연방정부가 작년 한해 연금 부문에 지출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연금지출 비율은 12.4%인 걸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이 수치는 독일, 덴마크, 일본과 비슷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국가들은 국민 평균 연령이 높은 나라들이어서 연금 지출 부담이 큰



* Considera aposentadorias, pensões, benefícios assistenciais e acidentários do INSS e servidores públicos em 2016
 ** Percentual da população acima de 65 anos em 2015

Fontes: OCDE, Banco Mundial e Paulo Tafner

국가별 GDP대비 연금지출 비율과 노년층 비율(%). (출처: <http://g1.globo.com>)

게 당연하지만 브라질은 국민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은 나라인데도 연금지출이 크다는 점이다. 브라질 국민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독일은 21%, 덴마크는 19%이고 일본은 노년층 비율이 무려 26%에 달한다.

젊은 국가에 속하는 브라질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또한 연금지출 규모가 주는 부담은 앞으로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브라질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부담은 다름 아닌 현재 젊은 세대와 후대에게까지 더 큰 짐을 안겨줄 게 뻔 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나 퇴직을 앞둔 연령층은 대부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editorialj/33323155172>)

기금(IMF)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브라질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연금개혁 논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왔고 지금도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상 중인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연금 지급을 늦춰 지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금 납부 기간을 늘려 기금을 확충하자는 목적이다.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연금개혁안은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남자 만 65세, 여자 만 62세로 늘리고 연금 최소 납부기간도 2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브라질 연방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연히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찬반양론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을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측에서는 의회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짜집기식 개혁'이 되지 않을까 심각

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중요한 개혁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호의적인 타이밍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부와 여당연합이 주도해야 개혁안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쉬울 텐데 불행하게도 현 테메르 행정부는 국민의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역시 호황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다. 일단 현재 연금 수혜자와 기대 수혜대상자가 숫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에 있어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혁의 결과로 떠안게 되는 불이익을 이들이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5년 후에나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면에서 실효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하루빨리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방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연방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수는 총 50만 명에 달한다. 연방기업들이 한 해 동안 지출하는 금액은 1조 4000억 헤알에 이른다. 이는 아르헨티나 GDP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브라질은 민족주의가 득세하던 1970년대 들어 수 많은 국영기업들을 각 분야에 설립했고 이들 대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재정 위기에는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효율적인 자산을 정리해 연방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일레트로브라스(Elektrobras)의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공항관리공사와 항만관리공사의 매각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매각과 민영화는 재정적자를 당장 완화시키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적자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연금개혁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재정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말이다.